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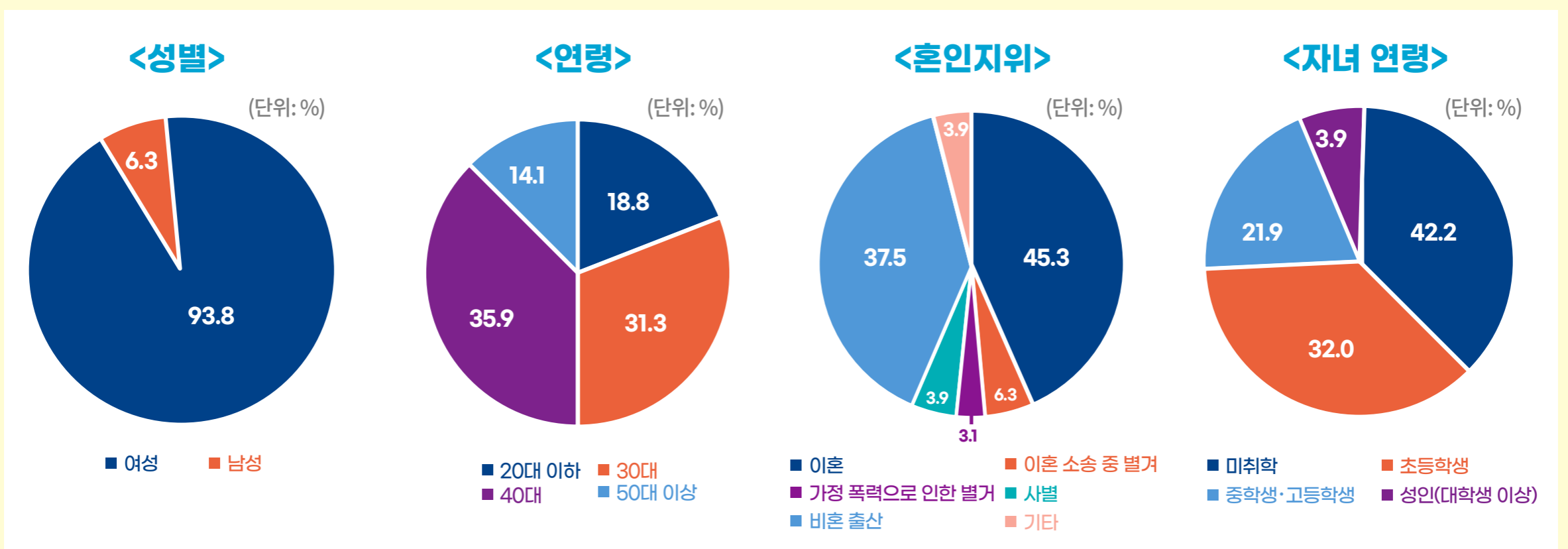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과 정책 과제*

이선형(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서울시 신대방삼거리역에서 보라매병원으로 향하는 언덕은 ‘모자원 고개’로 불린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4년 정부가 “전쟁미망인”과 자녀들을 위해 주택을 마련했던 데서 유래한다. “과부촌”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곳은 주택은 없고 지역명으로만 남아있다. **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었던 모자원은 현재 서울시에 6곳이 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미혼모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추가되어 총 26곳의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이 있다. 생활시설 이외에 상담 및 자조 모임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한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가 1곳 있다. 서울시 38만 한부모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은 수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시설 이용자도 전체 정원 대비 70% 전후에 그치고 있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한 한부모의 경험과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한부모가족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조사

- 조사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한부모(260명 중 128명 응답결과 분석)
-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 시설 또는 이용시설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한부모
 - 거주지 또는 이용시설 소재지가 서울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 조사기간** | 2021. 6.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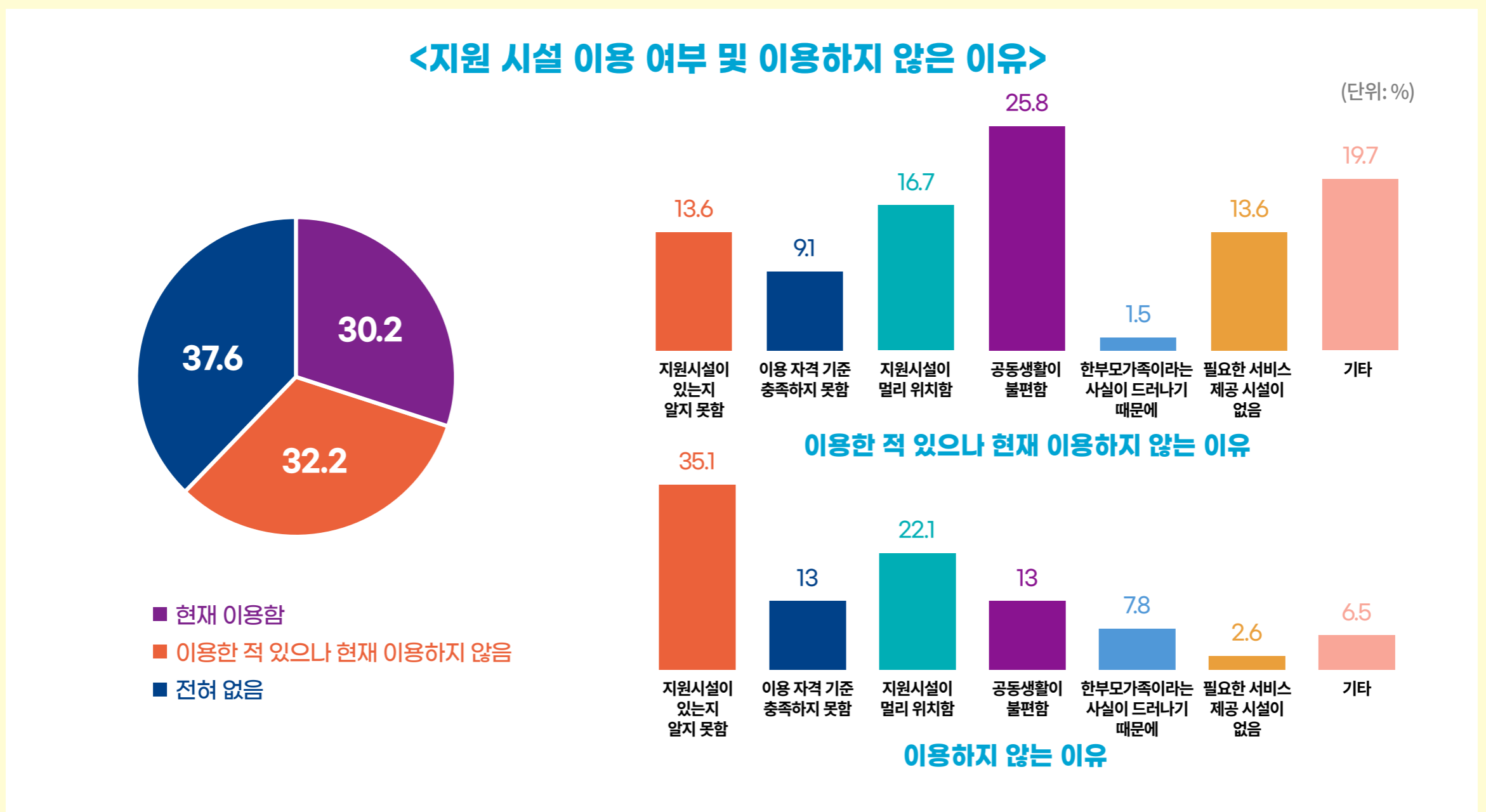
*참고: 이선형·기나휘(2021),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https://history.seoul.go.kr/>

한부모가족이 이용한 시설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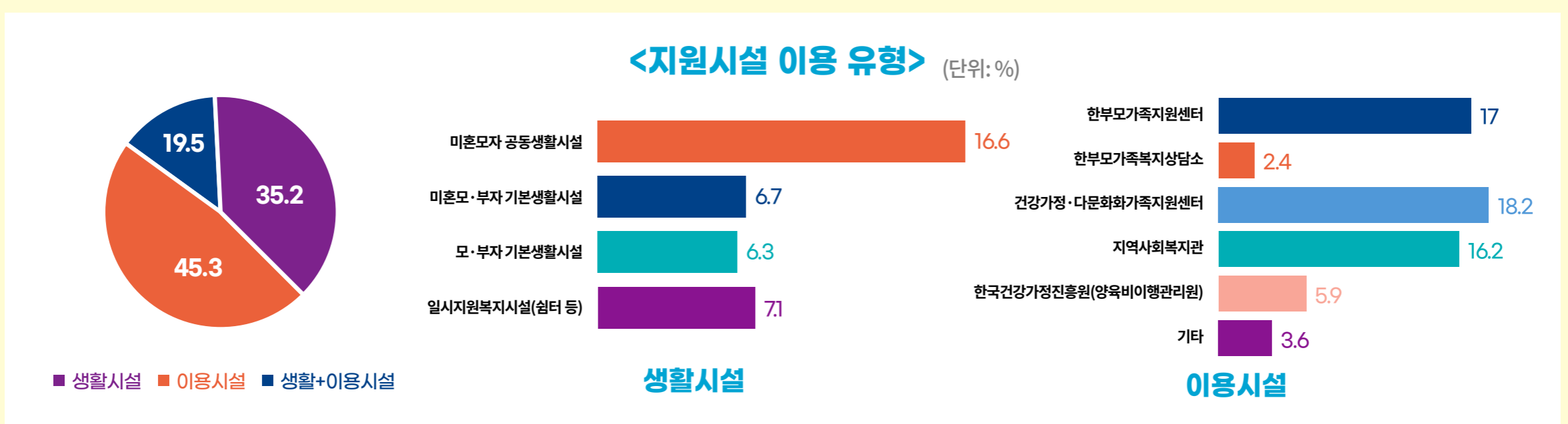
공동생활이 불편하거나, 지원시설 정보 몰라 이용하지 않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260명 중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30.2% (62명), 이용한 적 있지만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32.2%(66명),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37.6%(77명)로 나타남.
- 이용한 적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동생활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25.8%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이 없는 그룹은 ‘지원시설 정보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35.1%로 높게 나타남.



한부모가족 이용한 시설 유형은 이용시설 이용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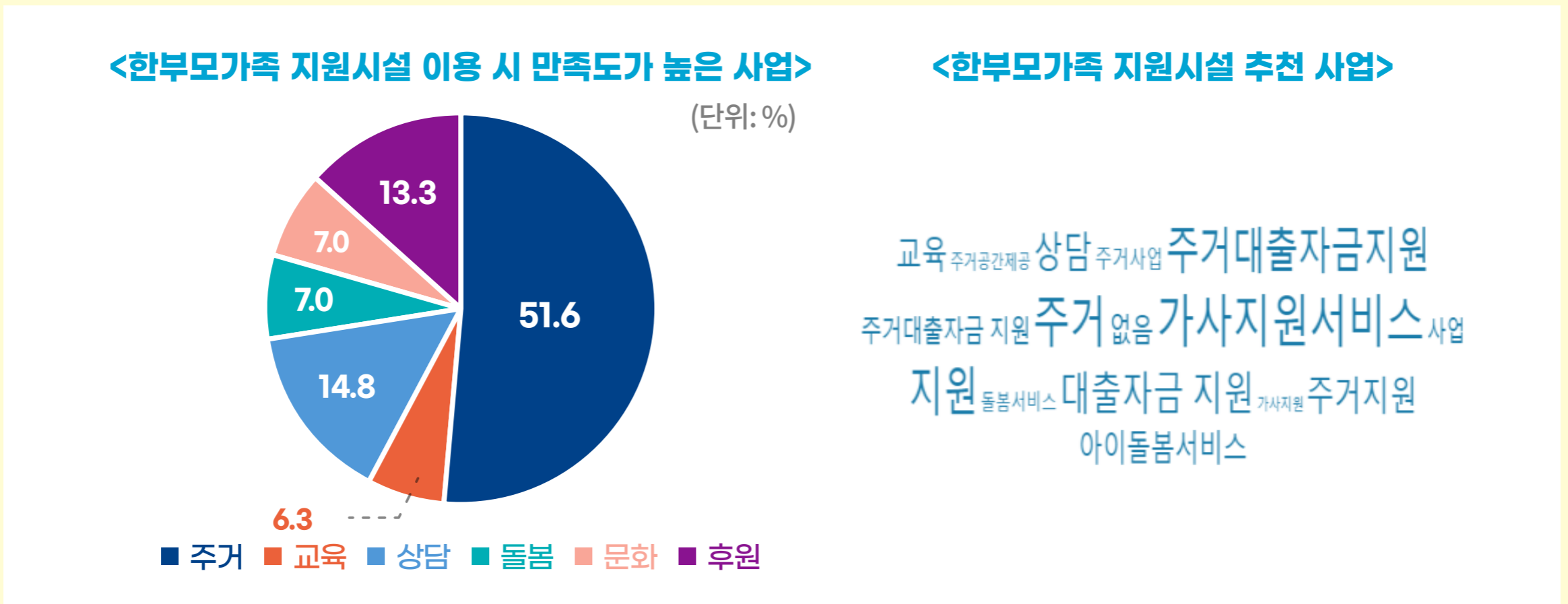
- 생활시설만 이용한 응답자는 35.2%, 이용시설만 이용한 응답자는 45.3%, 둘 다 이용한 응답자는 19.5%로 나타남.
- 중복 응답으로 실제 이용한 지원시설을 살펴보면,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이 16.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8.2%임. 지원시설 숫자를 고려해 볼 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일시지원시설 이용 비율이 높은 편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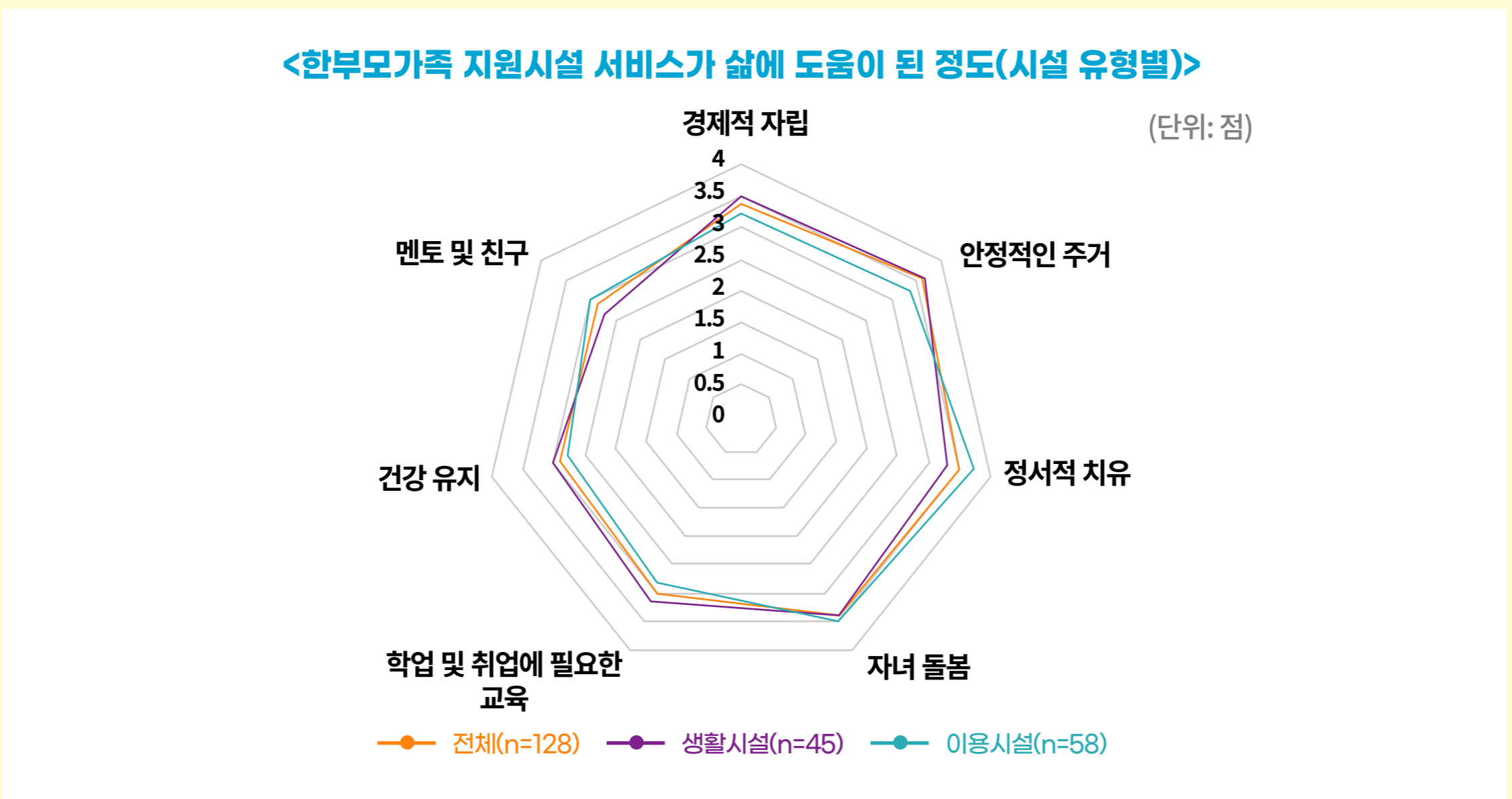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중 주거 관련 서비스 만족도 높게 나타남

-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은 주거가 51.6%, 상담과 후원이 각각 14.8%, 13.3%로 나타남.
- 다른 한부모에게 추천하고 싶은 사업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주거대출자금 및 가사지원서비스 등 응답 빈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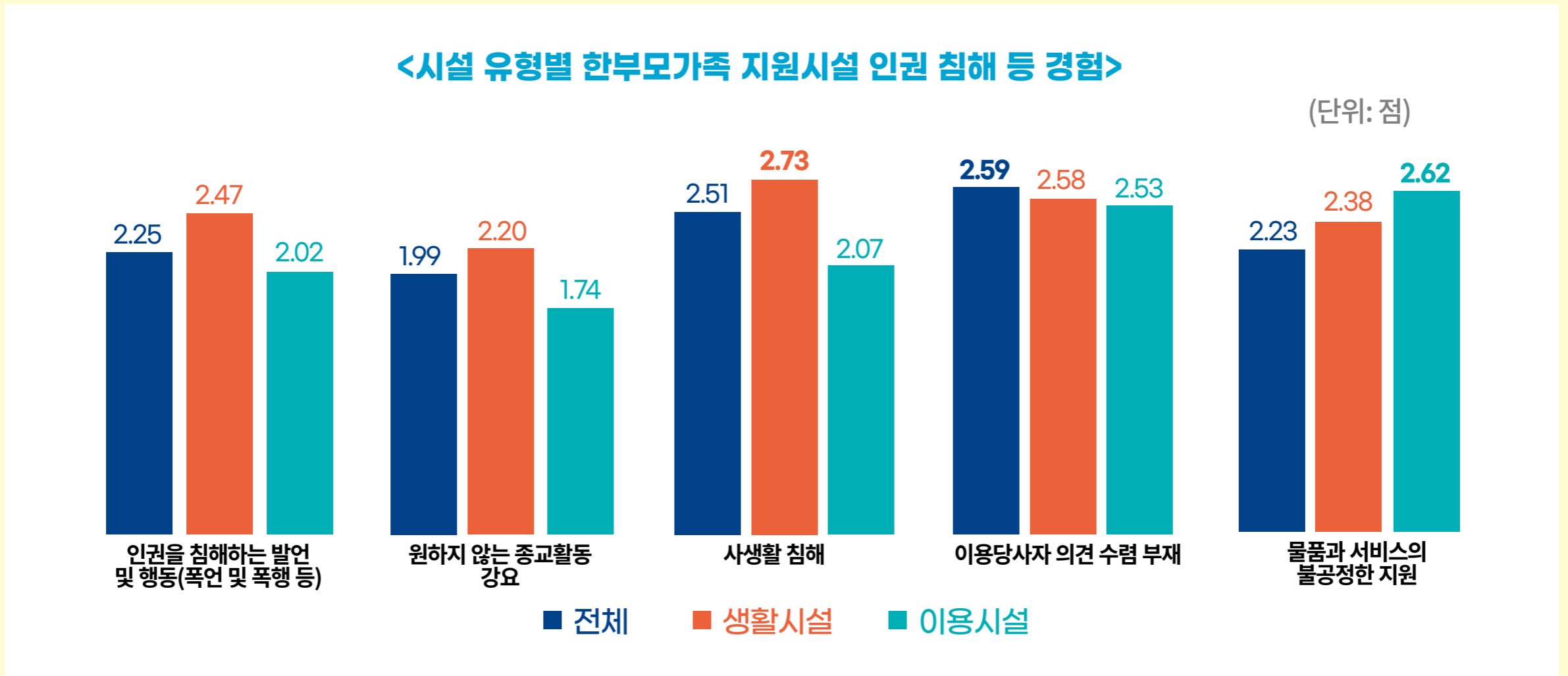
이용한 시설 유형별로 삶에 도움이 된 정도 다르게 나타남

- 지원시설 이용 서비스가 삶에 도움이 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생활시설만 이용한 한부모들은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 교육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이용시설만 이용한 한부모들은 정서적 치유와 멘토 및 친구 관계 관련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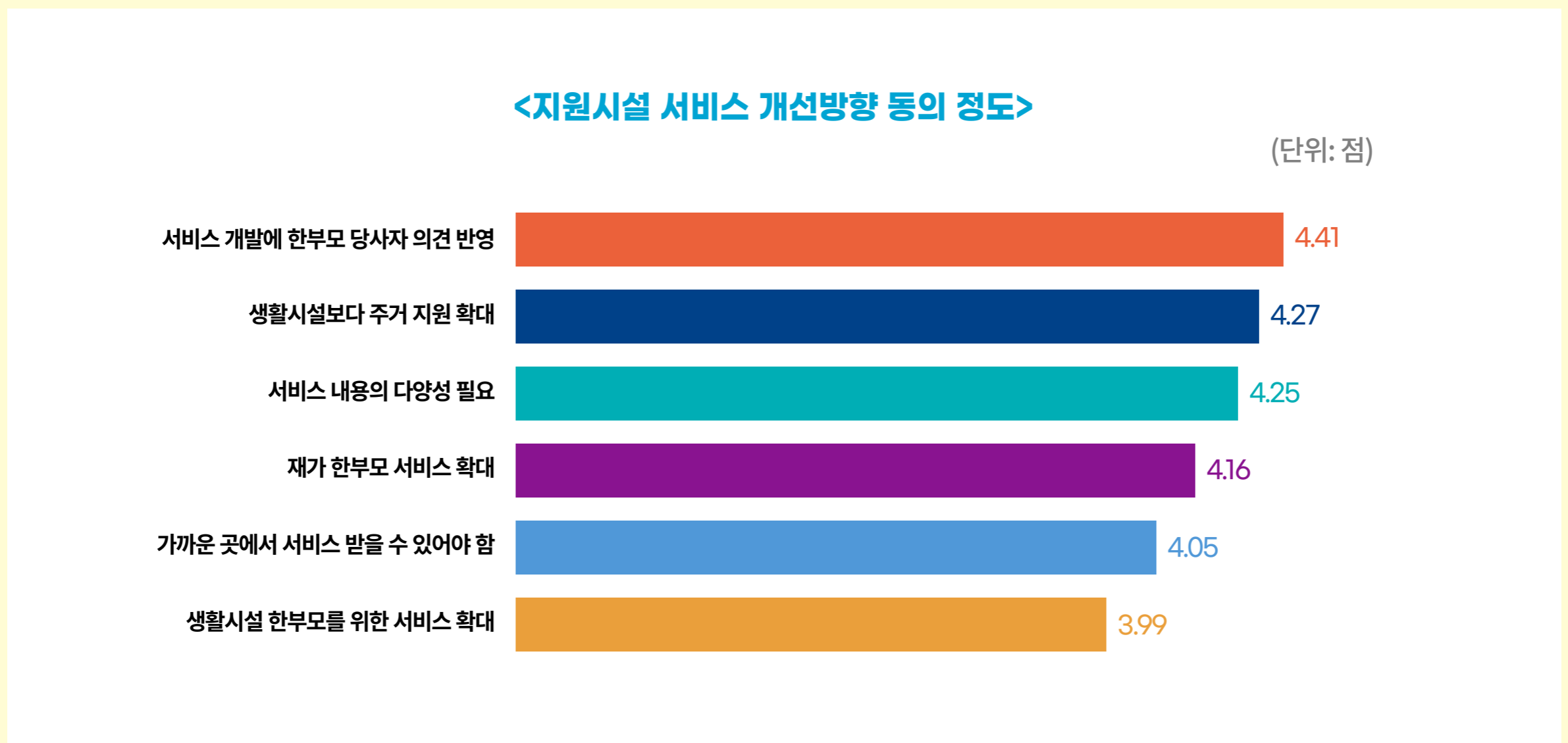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경험 빈도 높게 나타남

- 지원시설 이용 시 인권 침해 등과 관련된 경험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 당사자 의견 수렴 부재’가 2.59점으로 가장 높고, 원하지 않는 종교 활동 강요 항목이 1.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생활시설 이용자들은 ‘사생활 침해’(2.73점), 이용시설 응답자들은 ‘물품과 서비스의 불공정한 지원’(2.62점)이 높게 나타남.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개발에 당사자 의견 반영 수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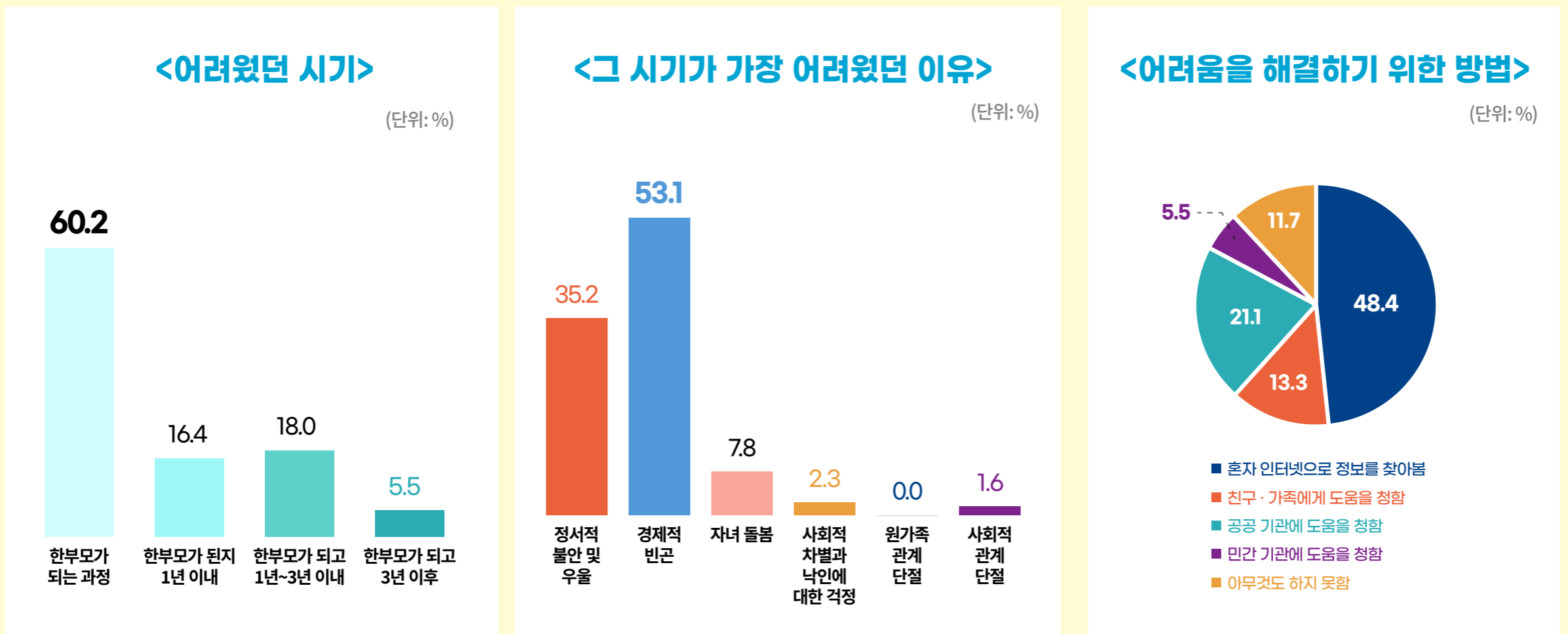
-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개발에 한부모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 정도는 4.41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시설 거주 한부모 서비스 확대는 3.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한부모가족 단계별 어려움 및 대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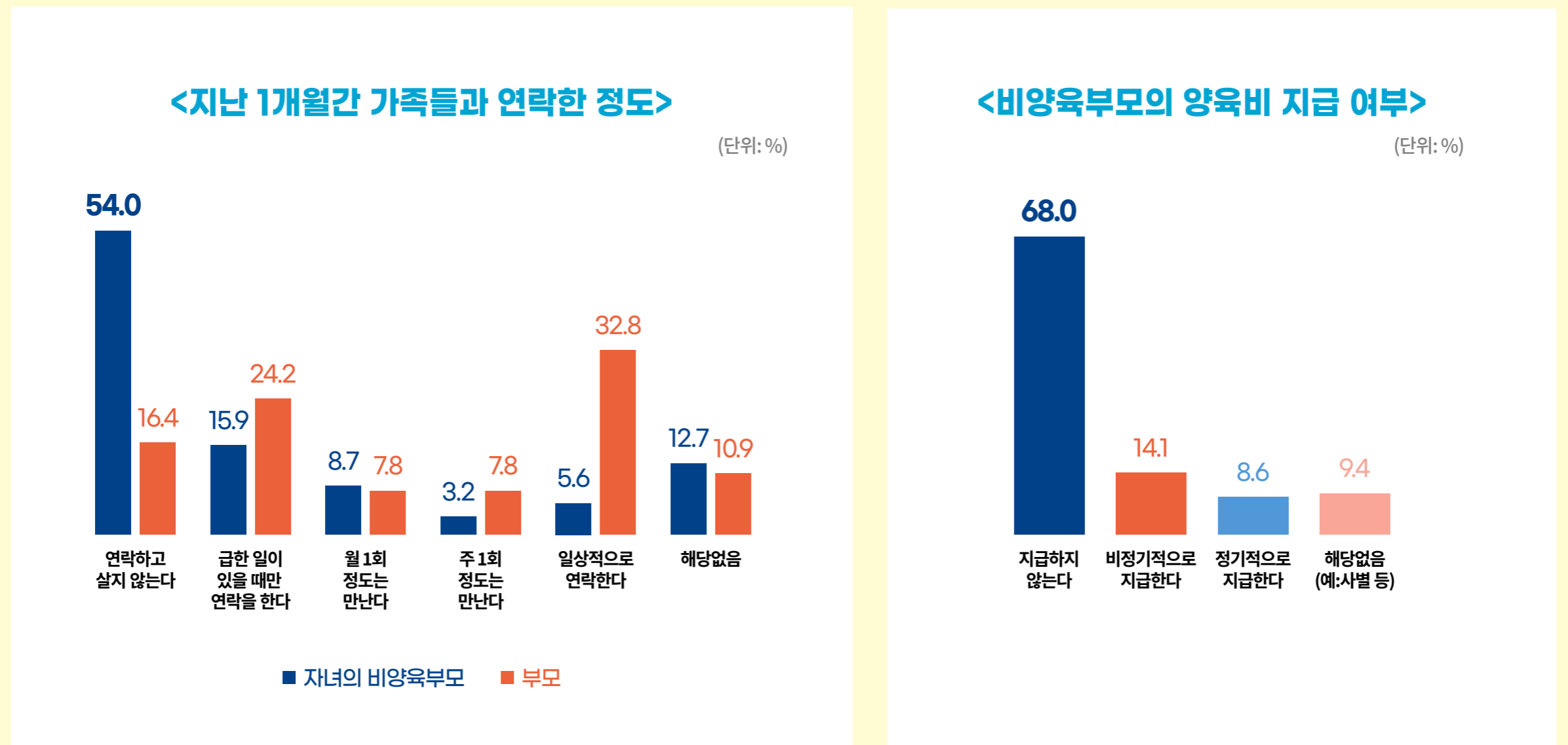
한부모로 전환되는 시기 어려움 높게 나타나 초기 집중 지원 필요함

- 한부모로 전환되는 시기가 가장 어려웠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초기 집중 지원 필요성 보여줌.
- 어려웠던 이유로는 '경제적 빈곤'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본다는 응답이 48.4%로 나타남.



비양육부모와는 연락하지 않으며 원가족과 일상적으로 연락함

- 지난 1개월간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연락하고 살지 않는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는 '일상적으로 연락한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았음.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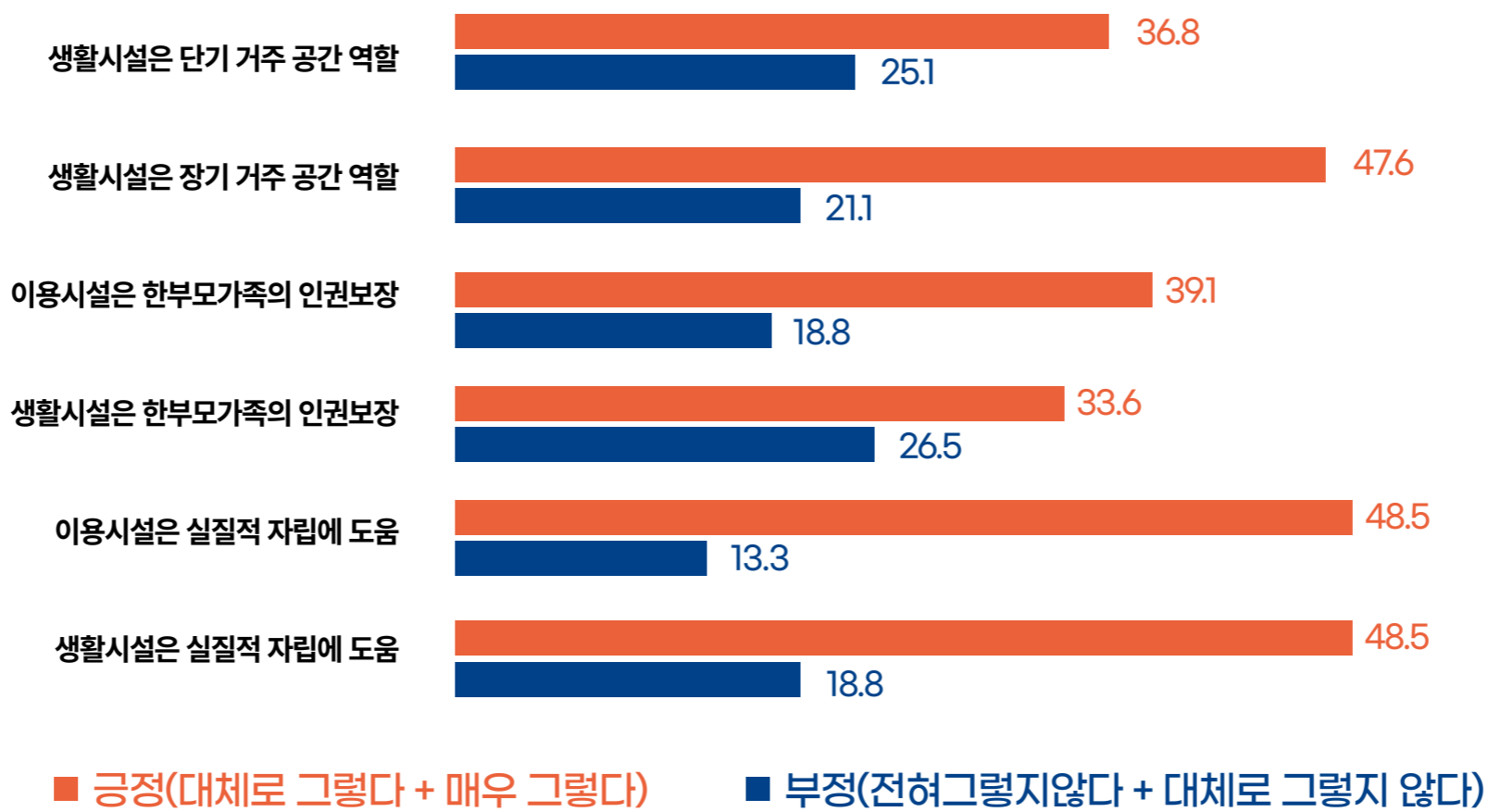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

- ‘생활시설이 장기 거주 공간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항목과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이 실질적 자립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생활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응답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지원시설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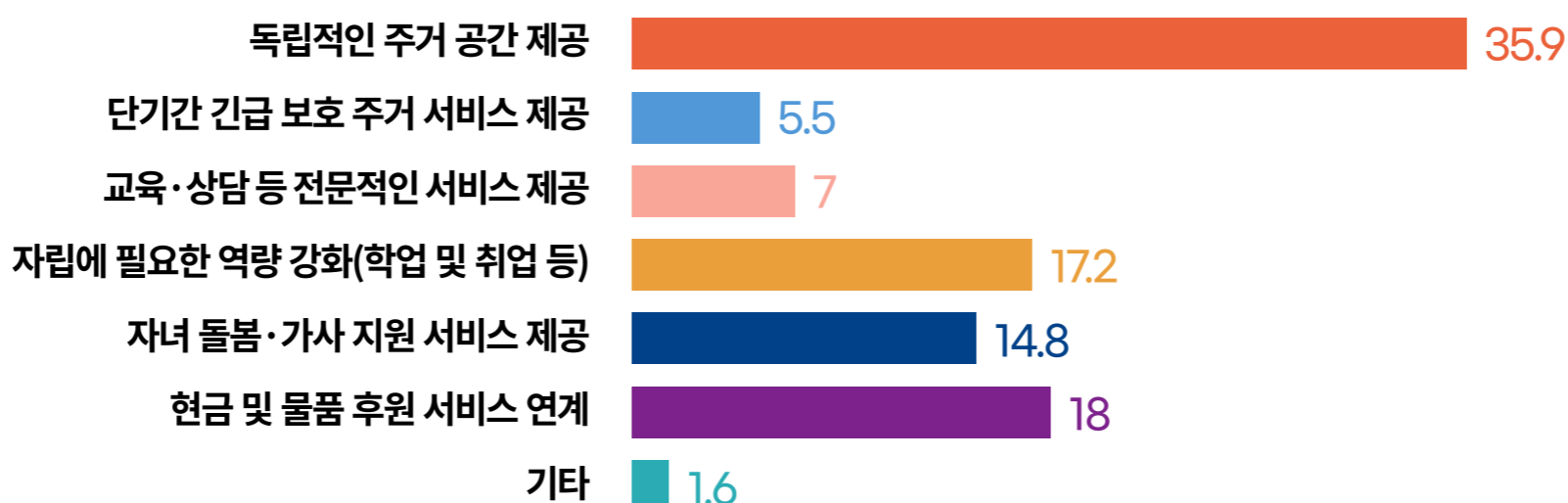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에 대한 수요 높게 나타남

- 한부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중에서 독립적인 주거공간 제공에 대한 수요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현금 및 물품 후원 서비스,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등이 그 뒤를 이음.

<지원시설 기능과 역할 중 중요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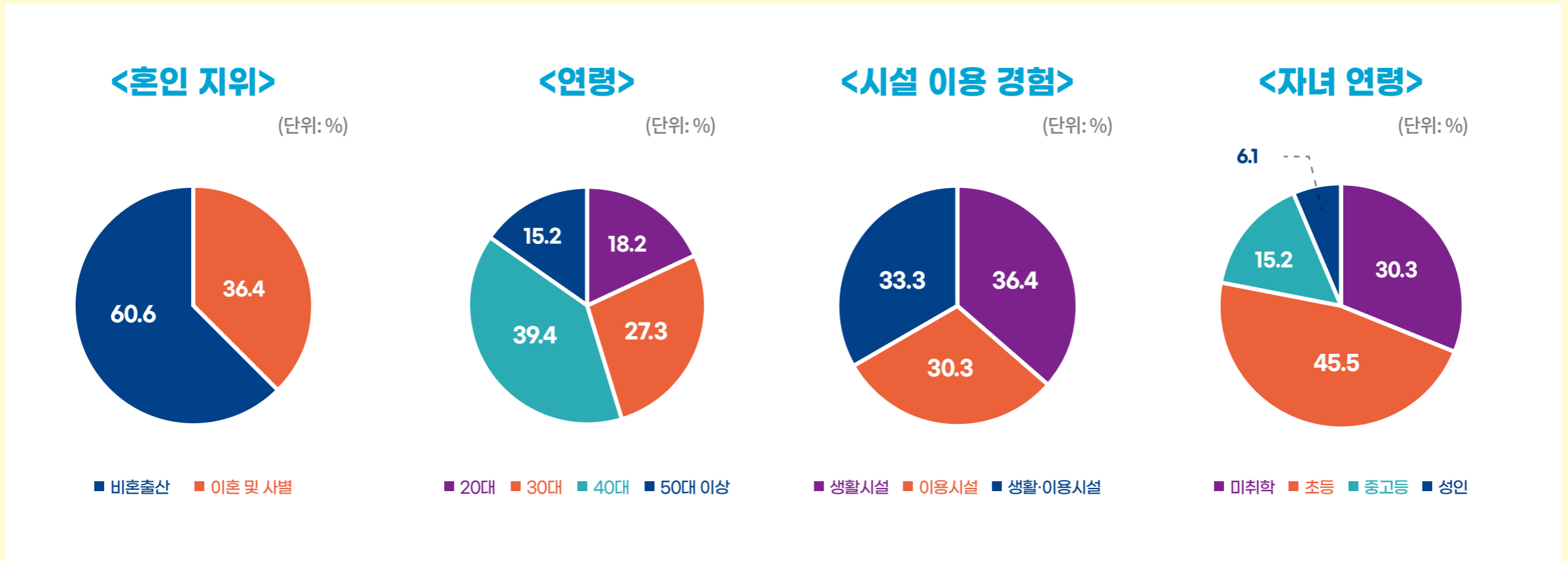
(단위: %)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 이용자 면접조사 주요 결과

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 조사대상: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한부모 33명
- 조사방법: 1:1 심층면접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자 면접조사 주요 내용 요약

영역	주요 내용
시설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주거 공간 확보 되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부족함 • 보호와 관리의 대상보다는 공동체 주민으로서 존중이 필요함 • 시설 운영에 당사자 의견 반영 적극적으로 필요함
주거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신설 및 추가, 커뮤니티 공간 및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는 공동주택 필요 • 주거 및 생활자금 등이 지원되는 긴급 지원 필요 • 자녀 연령 기준 검토 필요, 자립을 위한 주거 로드맵 교육 필요
초기 집중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된 여성의 임신·출산 지원 기능 강화 • 비혼 출산에 대한 달라진 인식 반영 필요 • 폭력 피해 한부모여성 집중 지원 필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 사각지대 없도록 이용시설 확충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 정책 역량 강화 필요 • 병원, 학교, 1366 등 기타 유관기관 연계 강화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자립 비용 확보를 위한 탈수급 유예기간 필요 • 집중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지원 강화: 장애·질병 등 •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 운영 관련 정책 과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 방향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가 생활시설 중심으로 전달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현재 생활시설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립·상담·교육·후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규정과 더불어 전체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가 필요함.
- (집중 지원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일반적인 주거 공간 제공 시설보다는 집중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가 필요함. 집중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기 여성, 장애·질병 가족 돌봄 한부모, 폭력피해 한부모 등이 될 수 있음.
- (주거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필요.

한부모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이용시설 확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개선만으로는 한부모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거 서비스 교육 및 정보제공, 지역별 주거 서비스 공급 상황에 맞는 정보 적시 제공, 자조 모임 체계적 지원을 통한 지역 내 한부모가족 거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원스톱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 한부모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영역의 공공 서비스는 한 부서에만 국한되지 않음. 주거, 건강, 돌봄, 일자리 등의 공공 서비스를 한부모가족 상황에 맞도록 발굴하는 전담인력이 필요함.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연계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 제안함.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의료·건강 전달체계와의 협업 강화) 배우자 및 원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한부모는 임신기에서부터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함. 이에 약국 및 병원을 통해 위기 임신·출산 지원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 운영 관련 정책 과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 (한부모 지원 서비스에 따른 시설 유형 구분 필요) 혼인 경험 유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구분이 아닌 집중 지원 서비스 유형별 구분이 필요함. 예를 들어 임신·출산기 지원, 폭력 피해 지원, 장애 아동 돌봄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집중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일시간급지원 시설 확대) 현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에서 일시간급지원시설은 서울시에 1개소만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함. 폭력피해를 경험한 한부모와 아동의 건강과 돌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대가 필요함.

한부모가족 주거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 (한부모가족 주거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기존 주거복지정책에서 한부모가족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기준이 개선되어야 함. 예를 들어 임대주택 지원 기준에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로 자녀 연령 기준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주거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한부모가족 지원주택 신설)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돌봄이 한 공간에서 제공될 수 있는 지원주택 신설이 필요함.

참고문헌

- 김은지 외(2019). 『한부모가족지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성정현 외(2017). 『한부모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오문준 외(2020). 『서울형 사회복지시설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오진방(2020). 「한부모, 장소가 만들어 내는 차이: 탈시설에서 답을 찾다」, 장애여성 공감 엮음, 『시설 사회』. 와온.
- 이선형·기나휘(2020). 『서울시 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명선·이영호(2020). 「한부모가족의 일·생활균형: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2(2), 175-218.
- 조애저(2004). 「모자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원.
- 황정미(2001). 「여성 정책과 젠더 정치 (gender politics): 복지 국가 및 후발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 75-113.
- 황정임 외(201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91(2), 191-223.